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활동나눔1-6

역사 바로 세우기! 재유럽동포운동과 그 탄압사례

최영숙 | 한민족유럽연대 청년문화연대부장

유럽동포사회의 형성

유럽의 동포사회는 일본동포사회나 미국동포사회와는 달리 뒤늦게 형성되었다. 유럽지역은 나라마다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기에 동포사회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유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하나둘씩 늘어났지만 그 수는 1960년대 초반까지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동포들의 유럽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제3공화국 당시 소위 ‘근대화 공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수출이 외화획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히 서독지역에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파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호위 아래 1950~70년대 ‘라인강의 기적’ (이 기적에는 물론 ‘한국전쟁에 따른 호황’도 일익을 담당했다)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독은 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기 시작했다. 서독은 1963년 한국정부와 특별고용계약을 맺고 그해부터 광산 노동자들을 수입했고, 1966년부터는 간호사들을 받아들였는데 1970년 초반 그 수는 도합 3만 명에 달하였다.

박 정권 초창기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원조와 차관에만 의존한 채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닦아나가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 실업률만도 30%에 달했다. 박 정권은 이 문제의 해결을 ‘인력수출’을 통해 찾았다. 당시 ‘한국인력수출공사’와 서독 ‘루르지방탄광업협회’의 계약에 따라 파독된 광부들의 70% 이상이 고졸자였고, 30%가 대졸 혹은 대학 중퇴자였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교사 출신 등도 포함돼 있었다니 그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했음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독일노동자를 대신해 라인강 인근 루르 지방 일대 탄광지대의 지하 1천2백m 막장에 투입된 이들은 원래 광부출신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하는 고된 채탄작업이 손에 익지않고 독일말 이해하지 못해 자연 재해와 사고(심지어 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했다)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은 오히려 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속히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에만 신경 쓸 뿐, 이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특히 동백림 사건 후 한

국정보기관의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됐다. 중앙정보부는 광부들 내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했고, 노동자들의 합숙소에 상주하는 일도 허다했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노동자들을 즉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광산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한국정부는 늘 독일정부와 기업주 편’ 이었던 것이다.

간호사들의 근로환경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정식 간호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마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일은 병원 허드렛일이었다. 독일은 의학수준도 높고 보수도 많다는 말만 듣고 기대를 잔뜩 안고 왔는데 온갖 궂은 일들이 맡겨졌다. 정부가 재외동포들이 처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작정 인력수출만 한 결과였다.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사건 “과 유럽동포 민주화운동의 시작

유럽의 민주화운동은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 “이 있은 후 7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되었다. 유럽운동의 시초였으며 가장 극심한 인권탄압사례였던 동백림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사건이라며 이른바 ‘동백림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8일, 주로 과거 구라파에서 유학한 바 있는 현역 대학교수와 현재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무려 1백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 제1차 진상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이 1958년 9월부터 1967년 5월 사이에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접선, 간첩활동을 해왔으며… (후략)” (1967년 7월 8일 『동아일보』 기사)

음악가 윤이상 선생 부부와 화가 이응로 선생 부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 정규명 박사 부부 등 독일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예술가, 학자 17명이 행방불명됐다. 며칠 뒤 서울에서 간첩으로 세상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독일로 급파, 독일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을 유인, 납치해 서울로 압송했던 것이다.

동백림 사건’의 핵심요지는 사건 관련자들이 동독의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진실인가. 195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생겨난 유럽의 한국유학생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중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경우 당시 서독주민들이 큰 제약 없이 동베를린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는 같은 민족이란 ‘감상적’ 생각에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통일을 주제로 토론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간첩행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봉대였다. 동독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 이념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된 서독에서 공부하던 일부 유학생들이 별다른 판단 없이 북한사람들을 만난 것, 이것이 실상의 전부였는데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간첩단인 양 조작되었다.

당시 독일언론은 발각 뒤집혀졌다. “한국의 정보원들이 독일에 와서 정권비판적인 한국인들을 납치해갔다”는 기사가 독일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동백림 간첩단사건’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박 정권은 연행된 이들이 동베를린(동백림) 주재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해 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끝내 이들에게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후 확산되는 반정부투쟁을 잠재우고, 3선개헌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끊어오르던 시기에 정적들을 묶어매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외에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관련자들에게 덧씌워진 ‘간첩’ 혐의는 특히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위력시위’로는 효과만점이었다. ‘동백림 사건’을 필두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이 줄줄이 이어졌고, 정국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색돼갔다.

‘동백림 사건’은 한국과 서독정부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독정부는 자국 내에서의 강제연행을 명백한 주권침해로 규정했고, ‘납치’해간 인사들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하고 나섰다.

결국 한국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1969년, 사건 관련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서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후과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서독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가 사건 당시 서독 대사로 있으면서 ‘동백림 사건’에 대해 본국에 항의했던 최덕신씨가 이 과정에서 결국 망명해 정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동백림 사건’을 겪은 뒤 독일의 유학생과 교포들은 박정희 정권 반대투쟁을 본격화했고, 1974년 3월 1일 독일 본 윈스터광장에서 박정희 군부독재와 유신체제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하 민건회, 초대회장 송두율)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유럽동포운동은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을 주축으로 지역과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본격적인 연대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 1977년 5월에는 일본의 한민통 및 미주지역의 동포운동단체와 연대해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 유럽본부 의장 윤이상)을 결성하는 등 해외동포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당시 독일의 동포운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운동흐름이다. 1960년대 이후 유학 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시절 4·19 혁명과 6·3 투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독일 땅에서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자체 토론모임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의식을 고양시켜나갔다. 유신체제 출범 후 이들은 박정희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독일사회 내 진보단체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둘째는 독일기업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하던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움직임이다. 당시 광부들의 경우 고된 막장일에 재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고, 하루 이틀만 결근해도 해고장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귀국을 요구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정부와 기업이 한인노동자들의 채용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 강제귀국 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셋째로는 광부, 간호사들과 적극 연대했던 한인교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독일에 진출한 한인교회 중 진보적인 교회에서 한인노동자들의 권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독일사회 내의 차별대우에 맞서, 동백림 사건으로 암울했던 분위기를 박차고 격렬하게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정보기관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운동권 인사들을 교민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중상모략을 비롯해 운동권 인사들 집에 괴전화를 하는 등 여러가지 공작과 와해작전들을 벌였다.

한 예로, 당시 유럽동포운동 내에서 발간한 대표적인 진보매체 『주체』(발행인 정철제)－1974년부터 1978년까지 계간지 형태로 총 15호를 발행- 동지의 편집국장이었던 오모 인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베를린한인성당에 신도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빨갱이라는 이유로 성당출입을 금지 당했으며 성당입구에서 공관의 사주를 받은 일부 신도들에게 구타 당하고 계단에서 밀려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광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산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정보요원들이 상주하면서 광산노동자들을 감시했으며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반체제 운동권 인사들은 재외공관으로 부터 여권을 압수당해 부득이 독일정부에 정치망명을 의뢰해 신변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외공관은 유학생들을 불러서 몇몇 운동권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과의 접촉금지령을 내리며 만일 그들과의 접촉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

독일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유럽동포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독일의 ‘성공’은 즉시 다른 나라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를 비롯한 북부유럽에서도 반독재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민족문제연구소(프랑스, 소장 이희세), 민주사회 건설협의회(스위스, 회장 최기환), 북구민족민주운동협의회(덴마크, 회장 임민식) 등이 속속 결성됐다. 독일 내에서도 1975년 광부 중심의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위원장 이종현)이 결성되었고, 1976년에는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재독한인여성모임이 각 지역에서 꾸려졌다. 또 한인노동자들의 문제와 조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연대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80년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회장 이화선 목사)가 결성되기도 했다.

80년대 유럽동포 민주화운동/ 광주항쟁, 김대중선생 구명운동

1980년 5월 유럽동포들은 광주항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분노 속에 솔한 눈물을 흘렸고,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얼어붙은 조국의 동지들을 대신해 유럽사회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려나갔다. 또한 유럽동포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광주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조직하여 베를린 중심가를 메웠다. 이 과정에서 유럽동포운동은 유럽 각 나라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의 연대에도 힘을 쏟았는데, 특히 세계사회민주당(Socialist International)으로부터 국제 당대회 때마다 초청받는 등 유럽 진보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유럽동포운동의 활약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대중선생 구명운동이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김대중선생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유럽운동권인사들은 즉각 가두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솔한 정당과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김대중선생의 석방을 호소했다. 외국정당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윤이상, 정규명, 최기환, 이희세씨 등 유럽동포운동의 지도자들이 직접 행사장 로비와 숙소 호텔입구에서 관계자를 붙들고 호소하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매일같이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각 나라의 정당과 단체들이 김대중선생 석방을 위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사회민주당과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등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각국 정부도 전두환 정권의 만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1970년 서독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을 방문해 동·서독 교류의 물꼬를 튼 뒤 1972년 11월 동·서 조약을 체결했던 독일사회당 브란트 총리의 경우 한국 정치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럽동포운동을 후원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광주항쟁과 김대중선생 구명운동은 유럽동포운동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 우호적 지지자들이 대거 운동에 뛰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흔쾌히 털었다. 유학생들은 하던 공부를 뒤로 밀쳐두고 통역과 번역, 각 나라 말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종교인들도 유럽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취임 후 처음 독일을 방문했을 때, 본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초청받아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유럽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선고를 규탄하며 유럽 각지에서 구명운동을 할 때 ‘간첩 김대중을 사형시키라’며 시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강연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있었을 때 김대중대통령 구명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요주의인물로 그자리에서 정보원들의 감시대상으로 전락되었다.

민주화운동의 확대 전개/ 유럽민협의 결성과 그에 대한 탄압사례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은 더욱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베를린 노동교실(회장 윤운섭)’ ‘전대일기념사업회 유럽본부(대표 김대천)’ 등이 결성됐고, 원풍모방, 동일방직 분규를 지켜본 ‘재독한인여성모임’ 회원들은 한국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 문부식, 김현장씨의 미문화원 사건을 계기로 ‘양심수후원모임’이 결성돼 구속된 조국의 동지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또한 매년 ‘오월민중제’와 ‘갑오동학농민제’ 등 다양한 대중행사를 개최해 유럽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지식인들과 연대해 ‘한독문화협회’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결성, 한국의 정치현실은 물론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려 나가는 데에도 힘을 썼다. 또한 민족학교와 문화모임 결성에도 힘을 쏟아 베를린의 ‘세종학교’(민족학교, 교장 김중한)와 ‘천동소리’(2세풍물모임, 단장 최영숙), 보훔지역의 ‘한국민중문화모임(회장 최태호)’ 등이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1987년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이하 유럽민협, 의장 정규명, 명예의장 윤이상, 루이제 린저) 결성으로 모아졌고, 유럽민협은 이후 유럽동포운동의 중심체로 우뚝서게 되며 유럽동포운동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이면에 유럽민협에 대한 공관의 중상모략과 와해작전도 급증해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반체제인사’ ‘친북인사’ 심지어 ‘북한공작원’ 이란 낙인이 찍혀야만 했다.

1989년 안기부는 유럽민협 및 구성원들에 대한 일련의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었다. 3가지 중요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989년 8월 21일과 22일 안기부는 ‘북한 조평통이 서독에 있는 유럽민협의 어수갑 총부 부장에게 지시, 전대협 평축준비위 정책기획실장 박종열씨를 통해 임수경씨의 방북을 추진했다’고 발표하면서, 유럽민협을 ‘평양축전 개최에 따른 해외공작 책임조직’ 이자 ‘북한의 대남공작전위조직’ 이라고 주장했다.

2. 평양축전에 대형걸개그림의 슬라이드를 보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구속기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건준위 공동의장인 홍성담씨로 부터 구타와 고문을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어 민협과 연관을 시켰다.

3. 1989년 8월 21일 안기부는 백기완 전대통령후보의 추천으로 방독한 김영애씨(한겨레신문 원주지국장)를 구속기소했는데, 그녀가 독일방문기간 동안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당시 구속 중인 남편인 김현장씨(전민련 국제협력국장)와 문부식씨의 구명을 위해 독일의 정당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협의한 후 귀국 후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월간 말, 역사비평, 사회와 사상 등 출판물과 한겨레신문, 평화신문 등을 우편으로 유럽민협에 보낸 것을 이유로 그녀를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 및 국가기밀누설’의 혐의를 씌운 것이다. 또 안기부는 김영애씨에게 ‘북과의 연계 속에 유럽민협에게 전대협의 축전참가를 위해 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씨를 소개시켰다’는 등 터무니없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행한 고문을 통해 유산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유럽민협과 장기수대책위는 녹색당과 사민당 국회의원 및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등을 중심으로 김현장·김영애씨 구출위원회를 구성했다.

1989년은 조국통일운동이 정점에 달하던 시점으로 노태우정권은 내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이른바 7·7선언이란 것을 발표해 남북한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게 되기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호도책일 뿐이었다. 그들은 통일운동세력들의 도도한 흐름을 막고자 임수경씨의 방북을 빌미로 그것을 해내외의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빌미로 삼게 된다.

당시 안기부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해외의 주도적인 운동단체들을 북과 연결시켜 단죄하고자 했는데, 이를테면 1989년 8월 임수경씨의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한 공소장에서 안기부는 당시 서독 영사관 내의 안기부 파견직원이 작성한 이른바 ‘영사증명서’를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며 북의 조평통의 지령을 받은 유럽민협이 다시 전대협에 지령을 내려 임수경씨를 입북시켰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대부분의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검찰은 영사증명서를 증거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영사증명은 흔히 "00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이라는 애매한 근거로 명확한 증거없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친북인사로 단정하기도 한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431쪽 참조)

또한 80년대 유럽동포에게 가해진 공안사건으로서 옥중 의문사를 당한 재독동포 안상근씨 사건(1985년)과 고국방문 중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둔갑한 재독동포 김형규씨 사건(1989년)

을 빼놓을 수 없다.

안상근씨 옥중의문사 사건: 안기부와 보안사는 당시 재독동포 진보지였던 „우리나라 “신문의 편집국장 안상근씨를 서울로 유인하여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씨 등이 연루)’ 과 연계를 지어 이른바 ‘서독유학생간첩 학원침투 사건’ 의 주역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지 얼마후 안상근씨는 서울 구치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국내와 해외를 연결시키고, 다시 해외와 북을 연결시킴으로써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국내운동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전정권은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이나 국내운동권과는 전혀 연관성도 없는 서독 망명권자를 국제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유인하여 구속하고 구치소에서 의혹에 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한국정부는 망명여권 소지자인 안상근 씨가 자진귀국하여 자수하였다고 독일정부의 문의에 대해 보고했다. 공개재판으로 허위사실임이 증명되면 과거 동백림사건 이래 한국의 역대독재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독일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한편 구미유학생간첩사건이 과장,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살’ 아닌 ‘타살’ 의 개연성이 크다는 의견이 독일쪽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더욱이 구치소에서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미루어볼 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독교포 김형규씨 간첩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87년 11월 2일 일시귀국했던 재독교포 김형규씨(당시 37세 · 함부르크 거주 · 전 광산기능공)를 간첩혐의로 체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는 “남미 등을 무대로 교포사회에 침투해 간첩활동을 하다가 북한공작원 김아무씨(프랑크푸르트 거주)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 중 검거” 했다고 밝혔다. 김형규씨는 한국의 검찰에 의해 유일한 증거로 삼아진 문제의 ‘이북에 다녀왔다’ 는 기간에 서독에서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하며 건강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간첩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고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어야만 했다.

역대독재정권은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마다 간첩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해외동포들은 번번이 이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차단하고 국내 운동을 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형규씨 사건 또한 노태우 정권이 6·29 선언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냉각시키고 개량화하는 동시에 민족민주운동권을 좌경용공으로 탄압하여 국민들과 분열시켜보겠다는 책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형규씨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유럽운동권은 유럽민협과 장기수대책위원회, 김형규씨 구출위원회를 중심으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교회, 녹색당 및 사민당 등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노동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가했으며, 이 문제를 서독국회 청문회에 상정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천부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과거 동백림사건의 경험이 있는 서독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그는 3년 4개월(바이체커 독일대통령 방한 이틀 전)만에 돌연 석방되어 독일로 귀환했다.

유럽에서 일어난 통일운동의 불꽃과 프락치 사건

1990년 11월 19일. 유럽동포운동가들은 이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독일 베를

린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결의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8년 남쪽 인사 1014인의 ‘통일선언’과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제안을 시작으로 남과 해외의 운동가들은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나섰다. 비록 1990년 1차 범민족대회가 남쪽 정부의 반대로 분산개최됐지만 범민족대회 후 이들은 상설적인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갔다. 그 결과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범민련 결성은 해외동포운동의 방향을 조국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민주주의에 눈뜨면서 점차 한국 독재정치의 뿌리에는 분단과 반통일의 역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았던 해외동포운동가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뒤이어 위기가 닥쳤다.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이끌어낸 유럽동포운동이었지만 그 활동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조직내부에 이복사회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1970~80년대에는 해외동포운동이 국내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국내운동에 의해 해외동포운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범민련을 둘러싼 국내운동의 분열이 그대로 해외동포운동에 투영돼 해외범민련의 분열을 촉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1995년 11월 유럽동포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윤이상 선생이 타계하고, 정규명 선생(유럽 범민련 초대회장)도 병마에 시달리면서 중심을 잃은 조직의 분열은 더욱 확산됐다.

유럽동포 통일운동의 분열에는 또한 안기부의 치밀한 정치공작도 크게 작용했다. 1990년대 유럽동포운동은 ‘프락치 노이로제’에 시달릴 만큼 프락치 사건이 빈발했다. 분열과 대립의 틈을 뚫고 들어온 이들은 20대 유학생에서부터 60대 좌익활동가까지 신분이 다양했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최아무 교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방 ㄷ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해직된 민교협 간부 출신의 최교수(국가보안법 관련 책자를 펴냈을 만큼 진보적인 교수로 알려져 있다)가 독일에 온 것은 대략 1994년 전후. 그는 오자마자 동포운동가들을 만나 “범민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국내활동과 명성을 의심치 않았던 동포운동가들은 그를 범민련 핵심간부로 임명했고, 독일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교수가 결함한 뒤 유럽범민련은 급격히 좌편향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뛰어난 말솜씨와 필력을 갖춘 최교수는 이를 교묘히 합리화하면서 반대세력들을 개량주의, 기회주의로 몰아부쳤고,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민련을 떠나기 시작했다.

최교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1998년. 당시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아무 참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참사는 다름 아닌 유럽 범민련의 북쪽 상대자였다. 그런데 김참사와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최교수가 김참사의 망명과 함께 범민련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디스켓을 들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현재 최교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송두율교수 공판 때 검찰측 증인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태를 접한 교포운동가들은 그때서야 최교수가 안기부와 관계 맺고 유럽범민련을 와해하기 위해 독일에 왔으며 북측 간부의 망명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범민련 유럽본부가 입은 상처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인간관계도 여지없이 파괴돼버린 것이다.

맺는말

그동안의 공관을 통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감시, 고립분열작전으로 인해 민주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동포사회의 분열의 골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운동권 인사들은 아직도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또한 교민사회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자면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독 때에도 대통령탄핵에 박수쳤던 인사들은 초대 되었지만 탄핵규탄과 민주수호를 위해 힘을 썼던 인사들은 대다수 초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수 초대되었던 운동권 인사들은 그 자리에서도 또 다시 감시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민단체 대표자모임이나 각종 공관주변의 행사에 운동권 인사들은 당연히 배제된다.

재외공관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대교민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 동포들을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던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운동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했던 노력을 인정하며 폭넓은 교민정책으로 나아가 운동권 인사들을 고립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는 역대 독재정권 하에서, 혹은 통일운동을 하다 망명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인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보장하여야 한다.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민주인사들의 공로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인권탄압에 대한 사과가 있을 때라야 만이 비로소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사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안영민 기자가 유럽운동권을 취재한 후 월간 말지에 기고한 글 중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고국을 떠나 유럽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정착 아닌 정착을 끝낸 이들에게 ‘고국방문’은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일이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딸들을 목메이게 부르다 눈을 감은 부모님, ‘친북인사’로 몰린 자신들 때문에 늘 경찰과 정보기관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던 형제들, 유럽에서 자신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호되게 치도곤을 당한 지인들... 게다가 유럽 동포사회 내에서도 대사관과 안기부 직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저 흑독한 군사정권 시절, 가장 먼저 조국의 민주화와 군사정권 타도의 깃발을 올렸던 그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왕래보다 우선은 명예회복입니다. 이는 이역만리 땅에서 눈조차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숨져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소한 이제라도 우리들의 활동이 한국의 민주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월 23일 베를린 외곽에 묻힌 윤이상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던 길에 한 ‘입국불허자’가 던진 물음이다. 과연 정부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위의 글은 많은 부분 안영민 기자의 글 “민주화와 통일 여정에 바친 청춘”(월간 말 2001년 175호)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